호계원법에 중재 조정 조항 추가

중앙종회 제188회 정기회…포상법 · 불교문화진흥법 등 제정

자승 스님(오른쪽)이 제188회 정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4일 제188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열고 불기 2556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예산 심의를 비롯해 호계원법 등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종회의원 심우 스님의 제정 스님 폭행 논란 속에 휴회하다 오후 5시 50분경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 중 정족수가 부족해 8일까지 휴회했다.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과 안철수 박사 신드롬을 언급하며 "이들에 우리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부처님 가르침처럼 언제나 창조적이었고, 늘 베푸는 보살행을 실천했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는 스스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인지 조고각하 해야 할 때"라며 "종회가 입법기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은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년이 되는 해이다. 2012년을 종단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종도들을 하나로 모아 불교중흥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진 정기회에서는 제주 관음사 주지로 선출돼 사무처장직을 사직한 성효 스님의 후임에 경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고산스님을 비롯해 원명 인환 정관 명선 월탄 종진 설정 무관 스님 등에 대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호법부장으로 임명된 혜오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상소기간의 단축, 특별재심청구권을 강화한 호계원법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중앙종회는 호계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호계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척 결정 등은 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상소제기 기간은 기존 최종심판이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변경했다. 또 출석요구서 전달 외에 기관지에 공고하도록 한 조문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삭제했다. 중재 조항을 신설해 징계 이외의 사건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중재 조정·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와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 중 정족수 부족 8일까지 휴회

'제척이유에 해당하는 호계위원이 결정에 관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불교와 종단 또는 사회에 공로가 있는 이에게 공적심사를 거쳐 종정, 총무원장이 법계승서와 문서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포상법도 제정됐다. 법계승서는 종정 스님의 포상으로 제한했다.

공적심사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각 2명씩 추천한 위원과 총무원 관련 부실장 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하도록 규정해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불교문화진흥과 종단 차원의 불교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불교문화진흥기금 설치와 불교문화단체 육성, 불교문화 보호 등을 담은 불교문화진흥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호계원장과 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을 현행 승랍·세납·법계로 규정한 것을 법계로 조정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다. 사찰 토지처분금을 총무원 재무부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도 차기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이 같은 결정을 끝으로 8일까지 휴회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집행부 성적은 10점 만점에 6.5점

조계종 총무원 제33대 집행부 2주년 평가 간담회 열어

"조계종 총무원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2년은 전임 집행부가 마련한 안정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모색한 시기였다. 승려노후복지 시행, 승가교육제도 개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해외교구 출범 등 종단 숙원과제를 풀고자 한 것만큼은 의미가 크다."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3대 집행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제33대 집행부에 남은 기간은 새로 시행해 온 사업들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만 스님은 제33대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로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꼽았다. 종단이 스님들의 의료비·요양비·수행연금 등을 지급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앞으로 종단은 승려복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승가교육을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고자 변화시킨 것도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제33대 집행부는 행자교육을 입문·수계교육으로 분리하고, 출가사이트 개설을 통한 출가홍보, 승가교육기관 교과과정과 교과목 개편, 국제불교학교 개원 등 승가교육의 개선과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승려사유재산 종단 출연, 주지 인사 고과제 시행, 사찰 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 등 종단 재정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도 제33대 집행부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제33대 집행부는 생수·상조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정만 스님은 "이는 분담금에 의한 종단 운영의 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단 재정 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키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정만 스님은 지역포교를 위해 지역 불교를 활성화시키고, 신도교육과 신도등록을 조직화 한 것도 제33대 집행부의 치적으로 평가했다.

스님은 "각 사찰로 포교역량을 모으고 이를 다시 종단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사찰 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기존 신도증을 멤버십 신도증으로 변경해 2011년 10월 현재 15만장을 발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미국·프랑스 방문 등 왕성한 해외순방 활동과 해외교구출범 등은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3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안상수 前 한나라당 대표의 "좌파주지" 발언 등으로 불거져 한동안 홍역을 치른 봉은사직영전환건처럼 정부와의 관계를 의심 받아 왔다.

정만 스님은 "제33대 집행부는 종단의 자주권 수호와 수행환경 보전을 위해 그 동안 사찰을 규제하던 각종 법령을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국립공원제도개선,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런가하면 스님은 "정부여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촉발된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정부여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냈고, 내부적으로는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만 스님은 제33대 집행부의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낙제점을 간신히 면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낙제점이 6점이라면, 제33대 집행부의 점수는 6.5점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종단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더라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이 남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서민 위해 최선 다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 맞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부

자승 스님(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31일 시청사 출근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불자인 박시장은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서민들의 정서가 잘 전달된 선거인 것 같다. 서울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과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선거가 끝났으니 지지자 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헤아리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배석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가리키며 "박영선 의원과도 경선은 치열했으나 끝나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침공양에는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 등이 배석했다.

조동섭 기자

수행환경 파괴되는데 정부는 뒷짐만

봉암사 인근 광산 허가 재검토 계획 없어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봉암사 인근 광산 허가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7월 경 백두대간보호구역(완충구역)인 희양산 봉암사 인근의 채광을 허용했다. 이번에 채광이 허용된 지역은 산림청이 이미 수년 전 채광을 불허한 바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산림청의 허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9월 2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돈구 산림청장을 대상으로 광산 개발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조계종도 문경 봉암사 인근 광산 사용허가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10월 28일 발송했다. 조계종은 공문에서 이번 개발이 봉암사 수행환경과 백두대간의 환경을 훼손하며 광산 허가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산림청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현장방문 및 재검토 이행, 승인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9월 경에도 조계종은 광산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산림청이 허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미흡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시 한 번 산림청의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봉암사 인근의 채광허가는 2005년 경 노천채광 시 산림훼손과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적 측면의 위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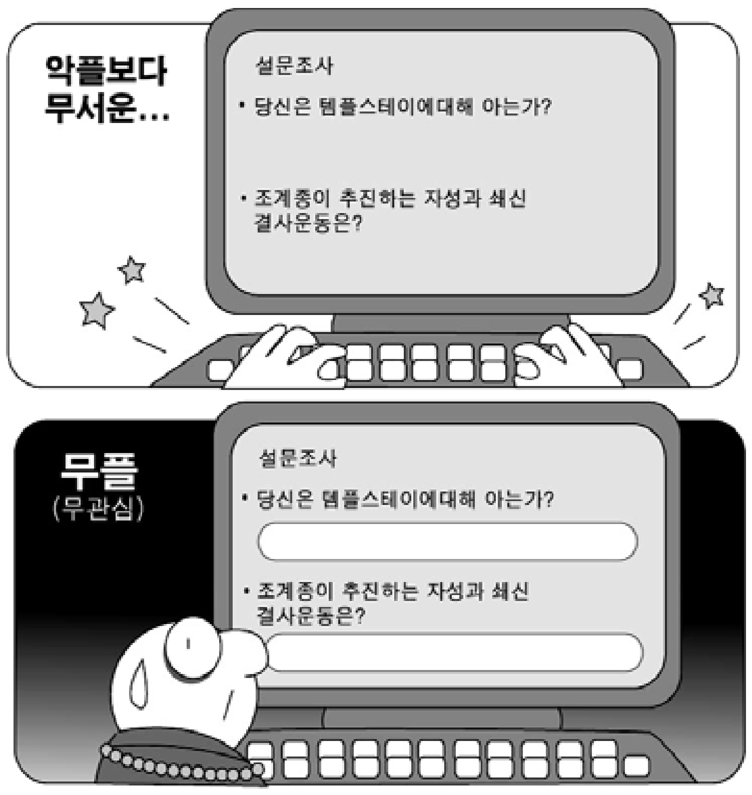
그러자 광업소측은 채광방법을 노천채광에서 굴진채광으로 변경하고, 허가면적도 2005년 10만8163㎡에서 4034㎡로 대폭 줄였다. 선광 작업도 타지에서 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봉암사 주지 원타 스님은 "허가 전에 설명회도 없었고 백두대간보호구역에 허가를 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일대는 산림 자원 등 보호할 것들이 있어 주민들도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 훼손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봉암사, 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박구원 만평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족성지 麟角寺
www.ingaksa.org 인터넷검색 인각사

2011 제3회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및 문학제

보각국사 일연선사는 고려 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선사이자 당시 고려 전 국민의 스승이었던 국사를 역임하셨던 선지식인 이었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라는 명저를 남긴 역사가입니다. 더구나 일연선사는 남해분사도감의 중심에 서서 재조고려팔만대장경 제작의 핵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사상, 종교, 언어 등을 집대성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의식을 일깨워 준 겨레의 성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의 뛰어난 업적에도 비해 선사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각사에서는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심도 깊게 연구 및 조명하여 선사의 민족자주, 자존정신 및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발전과 한국적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일연 · 삼국유사 관련 학술논문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선작에 대한 시상 및 학술제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2011년 11월 25일(金) 오후 3시 ~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강당
■주요행사 1. 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식
2. 당선 논문 발표
3. 일연문학지 출판기념식
4. 축하음악회 및 저녁공양

주 최 _ (사) 일연학연구원
주 관 _ 인각사/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후 원 _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시교육청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주지
사단법인 일연삼국유사연구원 원장 도 권 합장

麟角寺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TEL:(054)383-1161 FAX:(054)383-3758

보물 428호 보각국사정조지탑